

女性研究

The Women's Studies

2014. Vol. 87 No. 2 pp. 237~287

일-가족 양립정책의 유형과 사회·경제적 성과

황은정 · 유희원

일-가족 양립정책의 유형과 사회·경제적 성과¹⁾

황은정*, 유희원**

초 록

본 연구는 그간 탈가족화 정책에 경도되어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기 요인을 타개할 동력을 상실한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일-가족 양립정책의 차후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탈가족화와 탈성별화라는 두 가지 정책 요소를 중심으로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통해 국가별 유형을 도출하고, 출산율,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아동빈곤율 등의 성과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OECD 국가들의 일-가족 양립정책은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 '탈가족화 집중형', '탈성별화 집중형', '미발달형', '혼합형' 등 다섯 가지 이념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유형의 사회·경제적 성과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탈가족화와 탈성별화 관련 정책이 모두 발달한 국가들일수록, 출산율,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아동빈곤율 등의 측면에서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일-가족 양립정책 내에 탈가족화와 탈성별화 요소를 모두 강조하는 정책지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탈가족화 정책과 탈성별화 정책을 동시에 강조할 때 일-가족 양립정책이 내포한 성별 분업 강화 기제를 해소하고 여성의 이중 부담을 예방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탈가족화에 경도된 기조를 유지했던 한국 사회 역시, 탈성별화 요소를 강조하는 새로운 정책지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여성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향상됨은 물론,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신사회적 위험요소들을 타개해나가기를 기대해본다.

주제어 : 일-가족 양립정책, 탈가족화, 탈성별화, 퍼지셋 이념형 분석

1) 본고는 2013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여성가족정책 세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연구원(ejhwang@childfund.or.kr)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강사(heewon81@daum.net)

I. 서론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신사회적 위험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 정책 영역의 아젠다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득자로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발생한 가족 내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대하고 있고, 이에 대다수 OECD 국가들은 일-가족 양립정책의 확충을 통해 대응해오고 있다. 즉 돌봄의 사회화와 남성의 돌봄참여 증진을 통해 부모의 일-가족 양립을 지원함은 물론, 출산율 제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진, 아동빈곤 예방, 젠더평등 등의 사회·경제적 성과를 달성하여 후기산업사회의 새로운 위험요소에 대응해 나가는데 최근 사회정책의 방점이 모아지고 있다(OECD, 2007).

하지만 제도가 상정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성과의 달성 수준은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등의 성과에 있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처럼 높은 성과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군과 한국,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등처럼 성과가 낮은 국가군으로 분기되는 양상이 확인된다(윤홍식 외, 2011; 장지연, 2005).

일-가족 양립정책을 도입한 국가들이 설정한 목적과 그 기대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이처럼 정책성과 상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무엇보다 일-가족 양립정책을 구성하는 세부 정책의 구체적인 조응양태가 상이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일-가족 양립정책은 그 세부적인 정책지향이 돌봄 책임의 사회화에 있는지, 아니면 남성의 돌봄 참여 촉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탈가족화 정책과 탈성별화 정책으로 구분된다(김진옥, 2005)²⁾. 이때 대다수 OECD 국가들이 탈가족화 정책을 선행적으로 도입했지만, 이후 전개과정에서 일부 국가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필요에 따라 탈성별화 정책을 강화시킨 반면, 또 다른 국가는 기

2) 김진옥(2005)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아동양육 책임과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가능하다. 하나는 국가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돌봄을 사회화시킴으로써 가구에 할당된 무급노동의 부담을 분담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성과 여성 간에 불평등하게 할당된 무급가사노동의 부담을 조정함으로써 가구 내 노동의 성분업 구조를 재구조화하는 차원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탈성별화 정책이라고 보고, 일-가족 양립정책을 크게 '탈가족화 정책'과 '탈성별화 정책'으로 분류하였다.

존 정책경로에 고착되어 탈성별화 정책은 상대적으로 간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탈가족화 - 탈성별화 정책 간의 구체적인 조합 방식은 국가별 일-가족 양립 지원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상반된 사회·경제적 성과를 초래할 수 있다(송다영, 2011).

특히 탈성별화 정책에 비해 탈가족화 정책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일-가족 양립정책이 상정했던 출산율 제고,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진, 아동빈곤 해소 등과 같은 성과들의 동시 달성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돌봄의 사회화만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경우, 일과 가족의 양립은 여성에게 여전히 ‘선택’의 문제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과 같이 성별 고정관념과 그에 따른 성별노동분업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탈가족화 중심의 일-가족 양립정책은 애초 의도와 달리 성별 분업을 강화하고 여성의 이중부담(double burden)을 심화시킬 수 있다(Gershuny, Godwin and Jones, 1994; Hochschild, 1989). 전통적 성별 분업 가정을 그대로 수용한 일-가족 양립정책은 표면상으로는 중립적인 것으로 보일지라도, 여성의 노동자이자 돌봄자로서의 이중 역할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이중 부담이 전제된 삶보다는, 일 또는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하는 대안적 삶을 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박수미, 2006). 나아가 이처럼 일-가족 양립이 선택의 문제가 될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과 출산율이라는 성과들 간에는 상쇄효과(trade-off effect)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정책이 상정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성과의 동시적 달성 역시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일례로 탈가족화 정책이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지만 탈성별화 정책을 통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독일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지만 출산율은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OECD, 2012; OECD, 2013). 반면, 탈가족화는 물론 탈성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장지연, 2005; 홍승아, 2010).

이상의 논의는 일-가족 양립정책 내에서 기존의 탈가족화 정책은 물론 성별분업을 적극적으로 해체하려는 노력이 함께 강구되어야 여성의 이중부담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제도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기능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Chesnais, 1996; 손승영, 2005).

한국 사회 역시 후기 산업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신사회적 위험들, 특히 여성의 일-가족 양립과 저출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탈성별화 정책은 일각에서 그 필요성을 인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³⁾, 주로 보육료 지원을 중심으로 한 탈가족화 정책에 경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⁴⁾ 전술한 논의를 토대로 했을 때, 이러한 정책구조의 편향성은 제도의 본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일-가족 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초저출산,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여율, 높은 아동빈곤율 등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이며⁵⁾, 이는 탈가족화 정책에 편향된 제도설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일-가족 양립의 실현을 통해 출산율 제고,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진, 아동빈곤 해소 등의 사회·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담보해나가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탈가족화 및 탈성별화와 관련된 정책 요소들을 균형 있게 편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처럼 탈가족화에 경도된 일-가족 양립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기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차후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서구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탈가족화 정책과 탈성별화 정책 간의 구체적인 관계 설정 방식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비교하였다. 즉 탈가족화 정책과 탈성별화 정책을 기준으로 OECD 주요 국가들의 일-가족 양립정책을 유형화하고, 출산율,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아동빈곤율 등과 같이 제도가 본래 목적인 사회·경제적 성과의 달성 수준을 비교하였다.

3) 일례로 박근혜정부는 ‘아빠의 달’ 도입과 같은 남성 육아참여 확대 공약을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상의 첫 달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150만원 한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하였으나(기획재정부, 2014), 이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논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4) 한국에서는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함께 사회적 돌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보육시설 수, 보육아동 수, 보육예산이 전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윤홍식 외, 2011).

5)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3명(2010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저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9%(2011년 기준)로 OECD 평균 61.8%에 비해 낮게 나타나며, 중위 소득 50%를 기준으로 측정한 아동 빈곤율은 30%(2005년 기준)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II. 일-가족 양립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일-가족 양립정책의 개념과 범주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칭하는 용어들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일-가족 양립(work-family reconciliation)’ 정책,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정책, ‘가족친화정책(family-friendly policy)’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일-가족 양립’은 가장 오래되고 제도화된 이름이며 OECD, EU 등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신경아, 2009). 본 연구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일-가족 양립이라는 용어를 채택, OECD의 개념을 활용하여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 있는 조화를 촉진하고 젠더평등한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모든 가족 친화적 정책’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일-가족 양립의 범주에는 일반적으로 보육정책, 휴직정책⁶⁾, 노동시간정책 등이 해당된다(송다영·장수정·김은지, 2008; 윤홍식 외, 2007).⁷⁾

일-가족 양립정책과 가족친화정책은 개념상 크게 차별화되지 않으면서 서로 간 구분없이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다(홍승아 외, 2008b). 그러나 가족친화정책(혹은 가족정책)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선행연구들은 그 정책 범주에 있어서는 일-가족 양립정책과 다소 상이하게 규정하기도 한다. 예컨대, 아동양육수당과 조세감면제도가 가족 내 돌봄에 대해 보상을 지불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족정책의 범주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일-가족 양립정책으로 분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주로 여성)이 탈상품화되어 돌봄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황은정, 2013).⁸⁾ 즉, 일-가족 양립정책의 목표 자체가 이중 소득자 가구의 증대(상

6) 부모의 돌봄 노동을 ‘휴가’라고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휴가’ 대신 ‘부모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7) 일-가족 양립정책의 범주에 현금 지원정책이나 아동 교육정책 등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나(Gornick and Meyers, 2003; OECD, 2007), 조사의 편의성을 위해 기타의 정책 항목들은 세 가지 범주 내에 통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8) 그러나 취업 부모까지 아동양육수당과 조세감면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통해 부모 외 보육서비스 이용을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간접적인 보육정책에 해당될 수는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범주에서는 제외하였다.

품화)에 있으므로, 탈상품화를 전제로 하여 시행되는 양육수당과 조세감면 제도는 본 연구의 범주에서는 제외하였다.

2. 일-가족 양립정책의 목표

OECD는 부모와 자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가족 양립정책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진, 출산율 제고, 아동빈곤의 예방, 젠더평등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OECD, 2007).

첫째, 많은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일-가족 양립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노동력 공급이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일-가족 양립정책의 효과는 여성과 남성 근로자 모두에게 미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출산, 양육, 부양 등 가족의 돌봄 부담이 주로 여성에게 1차적으로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일-가족 양립을 지원할 경우 주로 여성 고용의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홍승아 외, 2008b).

둘째, 출산율 제고 역시 일-가족 양립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 목표이다. 미래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초저출산율은 예방해야 할 핵심적 과제이며,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일-가족 양립정책의 쟁점이 되고 있다. 출산율이 인구대체율을 밑도는 수준으로 하락하여 출산율 저하에 대한 국가적 우려가 높아진 저출산 국가들이 일-가족양립정책의 목표를 출산율 회복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홍승아 외, 2008b : 151). 이 경우 인구정책적 차원에서 개별 가정의 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일-가족 양립정책을 통해 제거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Eichhorst and Thode, 2002; 장지연 외, 2005 재인용).

셋째, 아동빈곤의 예방이 많은 국가에서 정책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아동빈곤 완화해법은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우선 부모, 특히 여성의 고용으로 발생하는 가구소득을 통해 아동빈곤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이다. 또한 보육서비스나 일하는 부모에 대한 양육수당, 세제혜택 등이 아동발달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킬 수도 있다. 이처럼 여성의 취업을 통한 가

구소득 증대, 보육서비스 또는 세제혜택 등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퇴치하고 아동발달을 추구하려는 다양한 국가적 노력이 곧 일-가족 양립정책의 발달을 이끌어낸다. 따라서 아동발달 부문 역시 일가족양립정책의 직간접적 효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홍승아 외, 2008b).

넷째, 몇몇 국가에서는 젠더평등을 일-가족 양립정책의 직접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젠더평등은 일-가족 양립정책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목표이지만, 대다수 국가에서 사실상 부수적인 정책목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들은 아버지의 돌봄 참여를 증진시키고 부모가 평등하게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

Ⅲ. 일-가족 양립정책 유형과 성과 관련 논의

1. 일-가족 양립정책 유형화 기준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일-가족 양립정책 유형화 기준으로써 탈가족화와 탈성별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탈가족화, 탈성별화 관련 개념과 해당 정책을 정리하고, 유형화 기준으로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1) 탈가족화

리스터(Lister, R.)는 탈가족화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학자로, 이를 ‘개인이 가족관계에 관계없이 시장의 유급 노동이나 국가의 사회보장 급여를 통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Lister, 1994; 류연규, 2007 재인용). 이후 Esping-Andersen(1999)은 Lister(1994), Orloff(1993)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탈상품화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가족의 복지 부담을 덜고, 가족에 대한 개인의 복지 의존을 감소시키는 정도’라는 새로운 개념의 탈가족화를 제시했다. 이는 개인의 가족 내 지위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가족 내 돌봄 부담의 재분배보다는 가족 자

체의 돌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류연규, 2007). 이어서 Leitner(2003)도 탈가족화 구조(de-familialising structures)를 ‘국가를 통한 보육 또는 시장을 통한 돌봄서비스 등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라고 설명하면서, ‘돌봄노동 지원’으로 탈가족화 차원을 보다 구체화시켰다.

이후 윤홍식(2005)은 탈가족화를 ‘부·모로서 남성과 여성이 아동을 돌보는 노동을 직접 담당하지 않고 부·모이외의 다른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개념화하면서 ‘아동 돌봄 노동이 부모에서 사회로 이전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가장 최근의 논의에서는 지원 대상(가족)과 지원 주체(국가, 시장)의 개념까지 정의에 포괄한 바 있다(윤홍식, 2011).

이처럼 탈가족화의 개념은 이론적 차원에서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어 와 합의되지 않은 바, 본 연구에서 사용될 탈가족화의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탈가족화 개념은 첫째, 레짐 연구와는 달리 ‘일-가족 양립정책’이라는 제도상에서 탈가족화가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양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 탈가족화의 개념을 ‘돌봄노동’의 부담으로부터 가족이 벗어나게 하는 정도로 보았다. 셋째, 탈가족화의 개념을 돌봄 노동을 하지 않을 소극적 권리로 한정시켜 정의하고, 탈가족화 정책으로는 국가가 제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돌봄 노동 부담을 완화시키는 경우만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부모가 돌봄 노동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탈가족화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성격을 지닌 정책 역시 탈가족화 정책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가 정책을 통해 돌봄 노동의 탈가족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국가’만을 그 주체로 상정하였다. Esping-Andersen(1999) 역시 시장에 의한 탈가족화가 보편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면서, 국가에 의한 탈가족화를 지향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의 탈가족화 개념은 ‘국가의 제도적 노력을 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직접적으로 완화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Lister(1994)와 Esping-Andersen(1999) 등은 탈가족화를 ‘구조’나 ‘레짐’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였으나 본 연구의 개념은 ‘제도적 노력’, 즉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또한 ‘돌봄 노동에 대한 지원’ 부분으로 탈가족화의 차원을 명시화했는데, 이는 Leitner(2003)

의 개념과 같다. 한편 윤홍식(2006a)과 달리 부모가 돌봄 노동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탈가족화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Esping-Andersen(1999)의 탈가족화 개념과 달리 시장을 제외한 ‘국가’만을 그 주체로 상정하였다.

이러한 탈가족화 개념에 부합하는 정책으로는 보육정책, 특히 공적보육 시설을 들 수 있다. 공공보육은 돌봄의 탈가족화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여겨지는데, 아동보육시설이 부모가 가족 내에서 해야 할 돌봄노동의 일부를 사회화시켜 부모가 노동시장에서 임금노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해 주기 때문이다(윤홍식, 2007). 김수정(2006) 역시 탈가족화 차원은 아동보육서비스 문제로 한정된다고 보면서, 탈가족화 사례로 스웨덴의 보육정책의 도입과 전개를 살펴본 바 있다.

2) 탈성별화

탈가족화 정책을 통해 돌봄 노동의 부담이 부모에서 사회로 일부 이전된다 하더라도 이는 완전한 대체라고 볼 수 없으며, 피돌봄자의 가족 내 돌봄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존재한다(Giullari and Lewis, 2005). 따라서 복지국가의 돌봄 제공방식 역시 탈가족화 또는 가족화라는 양 요소가 공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윤홍식, 2011), 이 때 돌봄의 주체를 여성으로 전제하는지, 아니면 남녀 모두의 권리로 전제하는지에 따라 돌봄 정책의 결과가 달라진다(송다영, 2011). 성별 노동 분업, 즉,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양육담당자라는 젠더 구조는 일반적으로 돌봄 주체를 여성으로 상정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가정을 그대로 수용한 채 돌봄 부담의 완화를 지원할 경우,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것으로 보일지라도 성별 분업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에서 보육서비스, 부모휴직 등이 부모에게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되면서, 결국은 돌봄이 성별화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Bjornberg, 2002; 김민희·김경희, 2010 재인용). 이처럼 일-가족 양립정책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성별 분업을 강화하고 나아가 여성의 이중부담까지 심화시키는 제도로 작동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성별 분업을 해체하려는 요소가 결여된 일-가족 양립정책은 역설적이게도 여성의 노동자이자 돌봄

자로서의 이중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무급가사노동 분담에 관한 실증연구들은 맞벌이 여성의 이중부담 현실을 보고하고 있으며(Gershuny, Godwin and Jones, 1994; Hochschild, 1989), 이처럼 여성이 이중 부담(double burden)⁹⁾의 긴장을 지속적으로 겪게 될 경우, 이중부담이 전제된 삶보다는 다른 대안적인 삶을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박수미, 2006; 손승영, 2011).

이상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탈성별화(degendering)’ 차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탈성별화란 가족 내 불평등한 성별분업 구조가 해소되는 정도로, 국가 차원에서의 탈성별화는 가족 내 불평등한 성별분업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을 의미한다(김수정, 2006). 남성의 돌봄자 역할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돌봄 노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¹⁰⁾ 돌봄의 탈성별화 요소를 포함한 일-가족 양립정책은 돌봄 노동이 남성과 여성 모두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이자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촉진한다. 돌봄의 가족화가 오히려 전통적인 성별 분업의 강화로 귀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관계없는 돌봄 권리’를 전제로 일-가족 양립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탈성별화의 핵심적 논리이다(송다영, 2011).

일-가족 양립정책 중 돌봄의 탈성별화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부성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등이다. 또한 아버지 할당제, 개인적 휴직사용 권리 여부, 높은 휴직 급여대체율, 휴직 유연 사용 권리 여부, 휴직 양도 가능 여부, 법정 최대 근로시간 등도 정책 내에 내포될 경우 탈성별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요소들이다. 정책의 조합에 따라 탈성별화 효과 정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윤홍식, 2006b), 많은 연구들에서 위

9) 이중 부담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맞벌이 가구가 급증한 현실에도 무급노동에 대한 여성의 일차적 책임은 거의 줄어들지 않아, 맞벌이 여성들이 기존 무급노동과 함께 노동시장에서의 유급노동 부담까지 떠안게 된 현상을 의미한다(김진옥, 2005).

10) Esping-Andersen(2002)은 여성의 유급노동은 증가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비율로 남성의 무급노동은 증가하지 않은 ‘지연된 혁명(stalled revolution)’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남성의 행동에 더 관심을 가지고 무급노동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와 같은 요소들이 강화될수록 돌봄의 탈성별화와 젠더 평등 효과가 증진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Coltrane, 2009; Gornick and Meyers, 2003; Hook, 2006).

첫째, 부성휴가(paternity leave)란 아버지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출산 후에 제공되는 휴가로, 남성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휴가제도이다(홍승아 외, 2008b). 부성휴가의 도입은 남성의 돌봄 노동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를 일-가족 양립의 주체로 상정하는 동시에 대상으로 포괄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윤홍식, 2005). 이러한 부성휴가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경우 돌봄의 탈성별화를 강화하는 정책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 둘째,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는 유급 노동의 유연한 조정을 보장하는 제도로, 탈성별화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자 남성 돌봄 노동 참여의 선결조건이다(홍승아 외, 2008b). 유연하게 조정된 시간을 남성과 여성이 돌봄 노동에 동등하게 분배할 경우 돌봄의 탈성별화가 증진될 수 있다. 셋째, 이와 유사한 논리로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단축될수록 돌봄의 탈성별화는 촉진될 수 있다. 넷째, ‘아버지 할당제’는 부모휴직 기간 중 일정기간을 아버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사용 방식이다. 성 중립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부모휴직이 현실적으로는 남성의 돌봄 참여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몇몇 노르딕 국가들에서 남성의 부모휴직 이용 자체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는 이인 소득자 가구로의 전환이라는 사회적 변화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돌봄의 탈성별화를 촉진시키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돌봄의 탈성별화를 촉진하는 또 다른 요소는 높은 휴가 급여대체율이다. 휴가기간 동안의 재정적 보상이 높을수록 남성이 부모휴직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고려할 때(Eurostat Statistical Books, 2009), 급여대체율에 따라 부모휴직을 통한 탈성별화 가능성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휴직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제도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급여대체율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외 휴직사용 권리를 개인 단위로 부여할 것인지 가족 단위로 부여할 것인지, 그리고 권리 양도가 가능한지 역시 탈성별화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휴직이 부모 중 누가 이용해도 관계없는 가족 권리로 이해될 때 대부분의 이용자는 여성이 되며, 이는 결국 공적

·사적영역의 젠더불평등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Smith, 2001; 윤홍식, 2005 재인용). 휴직이 개인 단위로 제공되고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모 각각이 휴직을 이용해야 하므로 남성의 휴직 사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5).

2. 선행연구의 동향

돌봄 제공 방식을 유형화하는 선행연구는 크게 분석 단위에 따라 ‘레짐’ 유형화와 ‘정책’ 유형화 연구로 분류될 수 있고, 유형화 기준에 따라, 즉, ‘탈가족화’, ‘탈성별화’ 등 어떠한 기준을 연구에 적용하였는지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다. 먼저, 레짐 유형화의 초기 연구에 속하는 Esping-Andersen(1999)은 탈상품화에 탈가족화 기준을 더하여 복지레짐 분류에 활용하였고, 네 가지 레짐 유형을 도출하였다. 또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젠더 레짐을 유형화한 류연규(2011)의 연구에서는 정책 영역과 노동시장 영역에서의 젠더 관계를 고려하여 가족정책, 노동시장 여성친화성, 가족 내 성별분업이라는 유형화 기준을 제시한다. 기존의 일-가족 양립정책 연구들이 주로 가족정책만을 유형화 기준으로 활용한 것에 비해 노동시장과 비공식 영역까지 포괄하였다는 점, 또한 유형화 기준과 요소별 점수를 산출하여 여러 국가들을 경험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레짐 유형화의 영역을 확장시킨 것으로 보인다.

일-가족 양립정책¹¹⁾을 유형화한 연구로 대표적인 것은 Leitner(2003)의 연구로, 탈가족화 기준에 탈성별화 기준을 더하여 돌봄 정책이 지닌 가족주의 특성을 유형화하였다. 그는 가족의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공공정책의 수준을 선택적 가족주의, 탈가족주의, 명시적 가족주의, 암묵적 가족주의로 분류하고, 나아가 부모휴직의 탈성별화 정도를 추가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성별화된 선택적 가족주의, 탈성별화된 선택적 가족주의, 혼합적인 선택적 가족주의, 성별화된 명시적 가족주의, 탈성별화된 명시적 가족주의, 혼합적인

11) 명시적으로 ‘일-가족 양립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본 연구의 일-가족 양립정책 범주(보육, 부모휴직, 노동시간제도)에 해당하는 돌봄 정책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연구들은 선행 연구의 범위로 보았다.

명시적 가족주의라는 여섯 가지의 유형을 도출하였다(Leitner, 2003). 정책 유형화 지표로 ‘탈성별화’ 기준을 사용하여, 젠더 관점에서 일-가족 양립정책을 유형화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윤홍식(2006b)은 탈성별화 정책의 필요성을 보다 강조하여, ‘남성 돌봄 노동참여 지원정책’만을 대상으로 OECD 국가들을 비교하였다. 실제로 탈성별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국가별로 서로 다른 유형으로 묶이는지 분석하여 복지국가 재편의 핵심 요소에 대한 유형별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탈성별화 정책을 유형화한 결과 스웨덴 군집, 핀란드 군집, 네덜란드 군집, 한국 군집, 오스트리아 군집의 5군집이 도출되었다. 이는 ‘젠더 통합’과 ‘남성의 가족화’ 등의 개념을 제시하고 남녀 간 돌봄 역할 공유의 문제가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윤홍식(2011)은 탈가족화와 공적/사적 방식 지배성 등을 기준으로 복지국가의 돌봄제공 방식을 공적 탈가족화우선형, 사적 탈가족화우선형, 공적 탈가족화·가족화 병행형, 사적 탈가족화·가족화 병행형, 공적 가족화우선형, 사공적 가족화우선형으로 유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삼식 외(2008)의 연구에서는 돌봄의 사회화(탈가족화)와 가족화를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가족정책을 유형화하였다. 분석 결과 호주 군집, 오스트리아 군집, 프랑스 군집, 덴마크 군집과 같이 4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일-가족 양립정책의 분류와 관련된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주요 기준으로써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성별화 등을 활용하고 있다. 다만 탈가족화와 탈성별화를 함께 준거로 활용한 연구는 소수라는 점에서, 양 기준을 동시에 포괄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탈가족화 또는 탈성별화라는 한 가지 기준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들의 경우 젠더 관점을 포괄하지 못하는 등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책 범주 측면에서, ‘노동시간정책’을 일-가족 양립정책의 범주로 포함하지 않고, 보육정책과 부모휴직정책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노동시간정책은 유급노동시간의 단축 또는 유연화를 통해 가족(특히 남성)의 실질적 돌봄노동시간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정책 범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편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실증분석보다는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정책을 유형화하고 있으나, 사례 분석만으로는 상이한 시점에서 상이한 국

가를 대상으로 유형화 기준을 적용했을 때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키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방법을 통한 유형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3. 일-가족 양립정책의 사회·경제적 성과

많은 OECD 국가들은 일-가족 양립정책을 통해 다양한 차원의 사회·경제적 성과를 추구하고 있다. 일-가족 양립정책의 목표가 사회·경제적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라면, OECD 국가들이 일-가족 양립정책을 도입한 이후 실제로 출산율,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아동 빈곤 감소 등의 성과를 달성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우선 일-가족 양립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주요 선진국들의 경험을 통해 비교적 명확히 알 수 있다. 스웨덴의 출산율 관련 정책들을 분석한 많은 연구들은, 보육과 휴직정책이 아동수당이나 세제지원에 비하여 출산율 제고 효과가 높음을 밝히고 있다(장혜경 외, 2007). 더불어 보육 이용률이 높은 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에서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GDP 대비 탈가족화 정책 지출 비중이 높은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장지연, 2005; 홍승아, 2010).

또한 일-가족 양립정책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진 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학자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과 부정(negative)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 두 마리 토끼(twin goals)를 동시에 잡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통계 지표들을 살펴보면, 노르딕 국가는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동시에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두 낮게 나타나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도 존재한다. 어떤 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이 상호 대체관계에 있지만, 또 다른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장지연, 2005). 특히 일-가족 양립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온 국가들의 경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실제로 일-가족 양립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의 상호대체 정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명제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장혜경 외, 2007). 다소 특이한 양상이 포착되는 국가도 존재하는데, 예컨대 프랑스는 출산율은 높은 편에 속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노르딕 국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일부 연구자들은 프랑스의 탈가족화 정책과 양육수당제도가 기본적으로 돌봄의 주체를 여성으로 상정한다는 점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다(장지연, 2005).

한편 많은 연구들에서 간과되고 있으나, 아동 빈곤율 감소는 일-가족 양립정책을 통해 달성 가능한 또 다른 사회·경제적 목표이므로 주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Gornick and Meyers(2003)는 보육제도가 여성의 고용율을 높여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높은 보육비용을 감소시켜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면서, 질 좋은 보육 그 자체로서 아동의 건강과 인지 발달 등의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빈곤층 등 저소득가구가 접근할 수 있는 보육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 아동빈곤의 악순환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OECD, 2006; 최영, 2007 재인용). 따라서 이러한 아동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일-가정 양립정책의 범주에 해당되는 아동보육이 핵심적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OECD(2011)에서 보육정책 관련 지출과 0-17세 아동 빈곤율 간 관계를 실증한 결과, 보육정책 관련 지출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빈곤율은 낮아지며, 그 관계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aylor-Gooby(2006)는 여성 고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정책을 사회투자정책의 한 축으로 제시한 바 있다(최영, 2007).

이상의 논의에서 도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특히 탈성별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몇몇 국가들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성과가 달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국가는 스웨덴으로, 일-가족 양립정책 내 탈성별화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동시에 달성하였다는 다수의 실증연구와 사례연구들이 존재한다(조영미, 2012; Gordo, 2009). 노르웨이 역시 탈성별화를 촉진하는 정책과 사회적 환경 조성이 출산율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장혜경 외, 2007), 덴마크의 탈성별화 정책은 누구나 돌봄 제공자가 되는 것을 지향함으로써 성별분업을

약화시키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한다(장지연, 2005). 이처럼 많은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서 탈성별화 지원 제도가 강력할수록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손승영, 2005; Chesnais, 1996).

위 논의는 이인소득자 사회로의 활발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서 전통적인 성별 노동분업을 고수하는 사회는 절반의 성공만을 달성하거나, 극단적일 경우에는 어떠한 성과도 얻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아동빈곤 완화 등의 사회·경제적 성과가 적정하게 달성될 가능성은 일-가족 양립정책의 발전, 특히 탈성별화 정책의 강조를 통해서 높아질 것이다. 탈성별화 정책은 탈가족화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못하였던 여성의 이중부담 문제를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두 정책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결국 다양한 사회·경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탈가족화 정책과 돌봄의 탈성별화 정책의 상호보완적 시행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IV.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분석대상은 일-가족 양립정책을 시행하는 OECD 국가들 중 보육정책, 부모휴직정책, 노동시간 정책 관련 지출 또는 공공시설 인프라가 일정 수준 이상인 국가이다. 다만 일-가족 양립정책 수준이 일정 정도 이상인 국가 중에서도 자료상의 한계로 인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들이 있다. 대표적인 복지레짐 연구인 Esping-Anderson(1990)의 사민주의 레짐(노르딕 국가 등), 보수주의 레짐(프랑스, 독일 등), 자유주의 레짐(영미 국가 등) 분류를 기반으로, 기타 동부유럽과 남부유럽 국가들(체코, 이탈리아 등)까지 포함하여 분석 대상의 범위를 최대한 넓히고자 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에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헝가리, 그리스, 스페인, 벨기에, 체코, 일본, 영국, 미국의 14개 국가가 포함되었다.

2. 분석방법

분석방법으로 퍼지셋 이념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이는 퍼지집합점수를 이용해 해당 국가의 제도적 조합이 어떠한 이념형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김교성·김성욱, 2011). 전통적 집합이 오로지 1과 0의 두 가지 소속점수만을 허용하는 것과 달리, 퍼지셋 분석은 ‘소속(membership)’과 ‘비소속(nonmembership)’ 사이의 소속점수를 측정할 수 있게 한다(Ragin, 2000; 정의룡·양재진, 2011 재인용). 따라서 퍼지셋 분석을 활용할 경우 한 사례가 어떤 이념형에 해당되는지는 물론, 각각의 이상형에 ‘얼마나’ 속하였는지 부분적 점수까지 알 수 있다(Kvist, 1999; 최영준, 2009 재인용).

Kvist(2007)는 이러한 퍼지셋 이념형 분석의 원리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부정의 원리(principle of negation)로, 탈가족화 정책과 탈성별화 정책 각각의 범주에 대해 ‘1- 해당 정책의 퍼지셋 소속점수’를 계산하여 부정범주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둘째, 최소값의 원리(minimum principle)는 구축된 이념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때 최소값을 해당 이념형의 소속점수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최대값의 원리(maximum principle)는 각 이념형별 소속점수 중 가장 큰 점수를 해당 정책의 최종 소속점수로 채택하는 방식이다.

이념형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한 후에는 먼저 주요 변수들을 Calibration 함수를 활용하여 퍼지 점수로 변환해야 한다. 이 때 세 개의 질적 분기점(완전히 속하는 정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정도, 중간 분기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질적 분기점 설정 시 현실적으로 ‘이론’에 입각하여 특정 값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국가들의 ‘평균값’을 중간분기점 값으로 활용하였다(김교성·김성욱, 2011). 또한 본 연구에서는 Ragin(2008)의 제안에 따라, FI(완전히 속함)에 대해서는 각 범주들의 95%에 해당하는 값을, FO(완전히 속하지 않음)는 5%에 해당하는 값을 설정하였다. 이후 퍼지 ‘And’(교집합) 기능을 사용하여 각 유형별 퍼지 소속 점수를 계산, 가장 큰 점수를 최종 점수로 인정함으로써 국가별 유형을 결정하였다(최영준, 2009).

3. 주요 변수 및 연구자료

본 연구에 투입된 변수는 ‘일-가족 양립정책’으로, 분류 기준에 따라 ‘탈가족화 정책’과 ‘탈성별화 정책’으로 명명하였다. 각각의 정책을 국가별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준을 가장 타당성 있게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용이하고 간결하게 각국 일-가족 양립정책 수준과 정책 설계를 비교하고자 정책의 구성 요소들을 계량화하였다.

탈가족화 정책에는 ‘보육정책’이 해당되며, 본 연구에서는 공공보육시설을 통해 아동이 돌봄을 받는 형태의 제도만을 보육정책으로 포함하였다. Gornick and Meyers(2003)의 지수를 참고하여, 각국의 보육정책이 탈가족화를 촉진하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 ① 보육권 보장여부, ② 0-2세 아동의 공공보육시설 등록률, ③ 3-5세 아동의 공공보육시설 등록률, ④ 공보육 비용의 부모 부담 비율, ⑤ 보육교사 수 대비 아동 수의 비율, ⑥ GDP 대비 0-2세 아동의 보육지출, ⑦ GDP 대비 3-5세 아동의 보육지출의 7가지 항목을 선정하였다.

우선 보육권 보장여부는 0-2세 아동 보육권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아동의 공공보육시설 등록률은 돌봄의 탈가족화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변수로, 많은 연구에서 돌봄의 탈가족화 수치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윤홍식, 2006a; 이삼식 외, 2008). 네 번째 항목인 공보육 비용의 부모 부담 비율은 공공재정 보육시설 총 비용 대비 부모 부담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부모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이삼식 외, 2008).¹²⁾ 다섯 번째 항목은 보육교사 수 대비 아동 수의 비율로, 주로 보육의 질(quality)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목이다. 보육교사가 돌보아야 할 아동의 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돌봄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마지막 항목인 GDP 대비 아동의 보육지출은 해당 국가의 아동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정책의지를 반영하기 위

12) 이 변수는 가족의 기회비용과 관련이 있다. 만약 아동보육비용이 높으면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했을 때 증가하는 순소득의 양이 감소할 것이며, 높은 기회비용으로 인해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고 노동시장에 참여하기보다 직접 가정에서 양육하려 할 것이다. 즉, 높은 기회비용은 탈가족화에 중요한 장애요소가 되는 것이다. 공보육 비용의 부모 부담 비율 항목은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포함되었다(이삼식 외, 2008).

하여 여러 가족정책 연구들에서 활용하고 있다(송다영·장수정·김은지, 2008; 이삼식 외, 2008).

탈성별화 정책의 범주는 ‘부모휴직정책’과 ‘노동시간정책’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부모휴직정책의 경우 시행 그 자체로서 탈성별화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책 구성 요소 중 탈성별화에 직간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요소만을 별도로 선정하였다. 또한 노동시간정책은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선택의 범위를 넓혀 특히 남성이 돌봄노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탈성별화 정책으로 포함하였다(Gerson and Jacobs, 2004). 최종적으로 포함된 탈성별화 정책 지수 항목은 ① 부모휴직 근로시간 단축이용 가능성, ② 아버지 할당제 유무, ③ 부모휴직 젠더 평등 지수, ④ 부모휴직 수준, ⑤ GDP 대비 총 휴직지출, ⑥ 법정 최대노동시간, ⑦ 노동시간 선택권 법제화 여부의 7가지 항목이다.

첫째, 부모휴직 근로시간 단축이용 가능성은 근로를 지속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형태로 부모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부모휴직을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남성의 휴직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므로(Eurostate Statistical Books, 2009), 탈성별화를 촉진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둘째, 아버지 할당제는 부모휴직 기간 중 일정기간에 대한 아버지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남성의 사용 유인을 강력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셋째, 부모휴직 젠더 평등지수는 Gornick and Meyers(2003)의 산술식을 바탕으로, 유급부성휴가가 있는 경우 1점, 부모휴직이 개인권리로 주어질 경우 2점, 소득대체율 80%를 기준으로 1-3점의 차등점수를 부여하여 산출하였다. 부모휴직이 개인권리로 주어질 경우 아버지 할당제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며(송다영 외, 2008), 소득대체율이 상당히 높을 경우 남성이 돌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다(Coltrane, 2009). 넷째, 부모휴직 수준은 소득대체율과 유급휴직기간을 곱한 값이다. 이는 소득대체율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휴직급여의 수준과 휴직의 길이를 동시에 고려하는 항목으로, OECD 가족통계 등 다양한 연구들에서 사용하고 있다(송다영 외, 2008). 다섯 번째 항목인 GDP 대비 총 휴직지출은 제도의 포괄범위와 실제 이용비용을 고려하기 위해 추가된 변수이다(이삼식 외, 2008).

노동시간정책 항목인 법정 최대노동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법으로

이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동시간 선택권 법제화 여부는 노동시간 계정제도, 탄력적 노동시간, 선택적 노동시간, 재량적 노동시간 등의 형태로 유연근로를 이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지 여부이다.¹³⁾ 이상에서 논의된 정책 지수 항목별 정의, 측정산식, 원자료 및 자료출처 등이 아래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13) 노동시간 계정제도는 초과 근무 시간을 저축해 두었다가 본인 필요에 의해 휴직 등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탄력적 노동시간제도는 특정 일 또는 특정 주에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적 노동시간은 핵심 근무시간을 제외하고 출퇴근을 자유롭게 시행하는 방식을, 재량적 노동시간은 사용자의 지시를 벗어나 근무하는 방식을 의미한다(최은영, 2008).

〈표 1〉 정책별 항목과 정의·측정산식·자료

정책	세부 정책	항목	정의	측정산식	원 자료	자료 출처
탈가 주화 정책	육아 보육 정책	보육권리 보장 여부	0-2세 아동 보육권의 법적 명시 여부	보장=1, 보장하지 않음=0	Gornick and Meyers (2003)	Gornick and Meyers (2003)
		공보육 등록률	총 0-2세 아동 수 대비 공공재정 보육시설에 등록된 0-2세 아동의 수	$\frac{\text{공보육 등록한 0-2세 아동 수}}{\text{0-2세 총 아동 수}} \times 100(\%)$	OECD Family Database (2013)	OECD Family Database (2013)
			총 3-5세 아동 수 대비 공공재정 보육시설에 등록된 3-5세 아동의 수	$\frac{\text{공보육 등록한 3-5세 아동 수}}{\text{3-5세 총 아동 수}} \times 100(\%)$	OECD Family Database (2013)	OECD Family Database (2013)
		공보육 비용 부담비율	공공재정 보육시설 총 비용 대비 부모 부담 비용	보육료 중 평균 부모부담 비율(%)	OECD Tax-Benefit model (2010)	OECD Family Database (2013)
		교사와 아동 비율	보육교사·보조교사 1인당 0-5세 아동 수	$\frac{\text{공보육 등록한 0-5세 아동 수}}{\text{0-5세 보육교사 및 보조교사 수}} \times 100(\%)$	OECD Family Database (2013)	OECD Family Database (2013)
	부모 후직 정책	GDP 대비 총보육지출	0-2세	$\frac{\text{0-2세 아동 보육 공공지출액}}{\text{GDP}} \times 100(\%)$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13)	OECD Family Database (2013)
			3-5세	$\frac{\text{3-5세 아동 보육 공공지출액}}{\text{GDP}} \times 100(\%)$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13)	OECD Family Database (2013)
		근로시간 단축 이용 가능성	부모휴직을 근로를 지속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 하는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시간 단축 이용 가능=1, 이용 불가=0	OECD Family Database (2013)	OECD Family Database (2013)
		아버지활동제 이용 가능성	부모휴직 기간 중 일장기간에 대하여 아버지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	아버지활동제 있음=1, 없음=0	OECD Family Database (2013)	OECD Family Database (2013)
		젠더 평등 지수	부상휴가, 유무, 부모휴직 개인적 권리 이용가 능성 여부, 소득대체율의 세 가지 척도로 각국 부모 휴직의 젠더 평등 정도 점수화	유급부상휴가 있음(+1), 개인적 권리(+2), 소득대체율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1~3)	D.Fodex(2011); Moss (2012)	OECD Family Database (2013) 김영옥 외 (2012)
탈가 주화 정책	노동 시간 정책	휴직수준	부모휴직기간과 소득대체율을 곱한 값	부모휴직기간(주) × 소득대체율(%)	OECD Family Database (2013)	OECD Family Database (2013); 류연규 (2011)
		GDP 대비 총휴직급여지출	GDP 대비 부모휴직 공공지출액	$\frac{\text{휴직급여 공공지출액}}{\text{GDP}} \times 100(\%)$	OECD (2013)	OECD (2013)
		법정 최대 노동시간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법으로 이를 넘을 수 없도 록 제한하고 있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	법정 최대 노동시간	ILO Working Time Database (2013)	ILO Working Time Database (2013)
		노동시간 선택권 법제화 여부	노동시간 결정제도, 탄력적 노동시간, 선택적 노동시간, 제량적 노동시간 등의 형태의 유연근 로이용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지 여부	법정 유연근로제도 있음=1, 없음=0	ILO Working Time Database (2013)	ILO Working Time Database (2013)

항목별로 값을 구한 후에는 이를 각각 탈가족화 정책지수와 탈성별화 정책지수로 통합하였다. 항목별 값의 ‘표준점수’를 구하여 국가별로 합산하였고¹⁴⁾ 값이 작을수록 일-가족양립에 도움을 주는 항목들, 즉 공보육 비용 부모부담비율, 교사와 아동 비율, 법정 최대 노동시간은 음의 값(-)으로 조정하였다.

먼저 탈가족화 정책의 각 항목별 값을 살펴보면(〈표 2〉 참조), 일본, 포르투갈, 영국, 미국, 체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보육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보육등록율은 모든 국가에서 3-5세가 0-2세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의 3-5세 아동 보육등록율은 99% 이상에 달한다. 0-2세 보육등록률은 체코가 가장 낮고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순으로 높다.¹⁵⁾ 공보육 비용의 부모 부담 비율은 헝가리, 스웨덴, 그리스 순으로 낮은 반면, 일본, 이탈리아, 포르투갈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비용부담이 높은 국가들은 주로 가족의 돌봄 책임을 우선시하는 상대적 특성으로 인해 아동보육 서비스 공급이 제한되고, 이것이 비용 상승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이삼식 외, 2008). 프랑스는 가족에게 돌봄 책임을 비교적 강하게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부모 부담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보육에 대한 지원 수준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육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교사와 아동 비율의 경우, 일본, 미국, 영국, 덴마크 등이 교사 1인당 아동의 수가 적어 보육의 질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0-2세 아동 보육지출을 살펴보면, 체코와 포르투갈이 전혀 지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미국이 따르고 있다. 0-2세 아동 보육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이다. 이러한 0-2세 보육지출 순위는 앞서 보육 등록율 항목에서 살펴본 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실제로 국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보육 이용이 좌우되고 있음을 나타낸

14) 이러한 표준점수 통합 방식은 Gornick and Meyers(2003), 송다영 외(2008), 류연구(2011) 등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이는 측정단위가 서로 다른 여러 항목들을 하나의 점수로 간명하게 나타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만 탈가족화와 탈성별화 항목의 원자료 값들을 표준점수로 전환한다는 것은 많은 국가 사이에서 해당 국가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어 줄 뿐, 이것이 절대값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5) 0-2세 보육등록률은 3-5세 보육등록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이라는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3-5세 보육이 주로 조기교육의 목적으로 시행된 반면, 0-2세 보육의 경우 일-가족 양립정책의 일환으로 강조된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이삼식 외, 2008).

다. 한편 3-5세 아동 보육지출의 경우, 그리스의 지출수준이 최하순위를 기록했고, 일본과 미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미국은 주로 시장을 통해 돌봄의 탈가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낮은 보육지출의 원인인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반면 덴마크, 프랑스, 영국 등은 3-5세 아동에 대해 가장 많은 보육지출을 하는 국가로 나타났다. 덴마크는 0-2세와 3-5세 아동 모두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보육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지출 변수의 구성 항목들이 국가 간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삼식 외, 2008), 덴마크 등 지출이 많은 국가일수록 탈가족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의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항목 값에 기초하여 도출된 탈가족화 점수는 스페인이 5.86점, 덴마크가 4.16점, 노르웨이가 3.29점, 프랑스가 2.52점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탈가족화 점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그리스로 -6.97점을 기록하였고, 체코가 -5.17점, 미국이 -4.38점, 헝가리가 -3.13점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스페인의 탈가족화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3-5세 아동 보육등록률이 거의 100%에 달하고, 교사 1인당 아동의 수가 비교적 적어 보육의 질이 담보된 것에서 기인한다.

〈표 2〉 탈가족화 정책 항목 값과 점수

국 가	보육권 보장여부	0-2세 등록율	3-5세 등록율	공보육 비용 부모부담비율	교사와 아동 비율	0-2세 아동 보육지출	3-5세 아동 보육지출	탈 가족 화 점 수
Belgium	1	39.2	99.0	19.1	7.0	0.1	0.6	1.44
Czech Rep.	0	4.0	78.9	10.6	13.40	0.0	0.4	-5.17
Denmark	1	65.7	94.1	13.6	5.25	0.7	0.7	4.16
France	1	48.0	101.1	10.0	6.50	0.4	0.7	2.52
Germany	1	25.4	93.9	23.1	23.12	0.1	0.4	2.24
Greece	1	11.3	48.3	6.5	12.70	0.1	0.0	-6.97
Hungary	1	10.9	86.7	0.0	6.00	0.1	0.6	-3.13
Italy	1	24.2	95.7	25.0	7.00	0.2	0.5	0.78
Japan	0	25.9	90.3	37.7	4.50	0.3	0.1	-2.26
Norway	1	54.0	96.2	12.1	12.12	0.9	0.3	3.29
Portugal	0	45.9	84.1	24.8	11.00	0.0	0.4	-1.36
Spain	1	39.3	99.3	24.6	24.58	0.6	0.5	5.86
Sweden	1	46.7	92.9	5.0	5.50	0.9	0.5	1.84
UK	0	42.0	93.3	24.7	5.00	0.5	0.7	1.14
US	0	43.2	66.5	19.5	5.00	0.1	0.3	-4.38

다음으로 탈가족화 정책 지표를 살펴보자(〈표 3〉 참조). 부모휴직을 파트타임 형식으로 단축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국가에는 포르투갈,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불가능한 국가로는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등이 해당되고 있다. 또한 아버지 할당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에 그치고 있다. 아버지 할당제의 유형은 기간할당형, 인센티브형, 균등분할형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OECD Family Database의 분류에 따라 기간할당형만을 포함하였다.¹⁶⁾ 아버지 할당제의 구체적인 제도 양상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약 12주(60일)의 아버지 할당제를, 포르투갈은 약 4주(20일)의 아버지 할당제를 각각 시행하고 있다. 노르딕 국가들에서는 1970년대부터 아버지의 돌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아버지 할당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1993년에 노르웨이가 최초의 아버지 할당제를 도입하였고, 이어 1995년 스웨덴, 2000년 포르투갈에서 제도화되었다. 결국 ‘부모휴직 단축이용’과 ‘아버지 할당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으로, 돌봄 노동의 남녀 공유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남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꾀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두 국가에는 아동을 돌보는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좋은 아버지 상’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제도 도입이 가능하였고, 도입을 통해 새로운 아버지 상이 더욱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했다(Ellingsøeter, 2000; 윤희식, 2006b 재인용). 한편 포르투갈은 일반적으로 강한 가족주의 국가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탈성별화 정책을 분석해 보면 오히려 남성과 여성의 돌봄 노동 공유를 지원하는 요소가 상당 부분 내포되어 있다. 윤희식(2006b)의 연구에서도 포르투갈은 노동시장에서 남녀의 임금격차가 거의 없고 주생계부양자 가족 모형도 일반적 형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포르투갈이 정책적으로도 전통적 성별분업을 고수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벗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부모휴직 젠더 평등 지수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6점으로 가장 높

16) 윤희식(2006b)도 부모휴직 기간 중 특정 기간을 남성에게 할당한다는 본래의 제도 구성 취지를 고려한다면 기간할당형 외의 유형을 아버지 할당제로 규정하기에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고, 그 뒤를 벨기에와 일본이 5점으로 따르고 있다. 부모휴직 젠더 평등 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독일이며, 프랑스, 헝가리, 미국 역시 낮은 편이다. 젠더 평등 지수에는 유급부성휴가 여부와 부모휴직 개인권리 여부, 소득대체율이 포함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가 높을수록 남성이 부모휴직을 사용할 유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젠더 평등 지수 상위권인 스웨덴은 젠더 평등을 일-가족 양립정책의 목표로 명시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요소를 추구하고 있으며, 덴마크와 노르웨이 역시 이와 유사한 경로를 따르고 있다. 반면 젠더 평등 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프랑스와 독일은 전통적으로 가족주의가 강한 국가로, 프랑스는 유급부성휴가는 있지만 소득대체율이 19%로 낮고 부모휴직이 가족 권리로 주어지며, 독일은 소득대체율은 67%로 높은 편이지만 유급부성휴가가 없고 부모휴직 역시 가족 권리로 주어져 양국의 젠더 평등 지수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휴직수준은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 65주의 긴 휴직기간과 80%의 비교적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26주의 전체 휴직기간 동안 100%의 소득대체를 보장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휴직기간은 22.5주이며 소득대체율이 90%에 달한다. 그러나 미국, 그리스, 스페인, 영국의 경우 휴직수준이 모두 0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휴직기간 동안 어떠한 급여도 보장하지 않거나 휴직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데에서 기인한다. 미국은 부모휴직이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가족간호휴직 제도에서 아동 돌봄을 위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며(이삼식 외, 2008), 스페인은 부모휴직 제도는 있지만 무급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유급부모휴직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GDP 대비 총 부모휴직지출은 체코(1%), 스웨덴(0.8%), 헝가리(0.8%), 노르웨이(0.7%), 덴마크(0.6%) 순으로 높았고, 이탈리아(0.2%), 그리스(0.2%), 일본(0.2%), 벨기에(0.2%)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아동의 가족 내 돌봄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에도 휴직 관련 지출은 0.3%에 그쳐,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지원 간의 괴리를 엿볼 수 있다.

노동시간정책 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항목인 법정 최대노동시간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40시간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프랑스의 경우 35시간, 벨기에의 경우 38시간으로 나타나 상위권을 기록했다. 프랑스의 35시간 노동시간 법제 도입은 아동 돌봄을 위한 노동시간을 남성과 여성이 유사한 수준으로

사용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홍승아 외, 2008a). 또한 노동시간 선택권 법제화여부를 보장하는 국가에는 포르투갈, 일본, 체코, 노르웨이 등이, 보장하지 않는 국가에는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등이 해당된다.

항목 값을 바탕으로 최종적 탈성별화 점수를 도출해보면, 노르웨이가 8.54점으로 매우 높고, 스웨덴이 7.22점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어 덴마크가 2.55점, 포르투갈이 2.17점, 체코가 1.42점 순으로 높다. 특히 포르투갈과 체코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적인 경향을 띠는 국가로 여겨지지만, 실제 탈성별화 정책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의외성을 찾아볼 수 있다. 반면 탈성별화 점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4.66점인 미국이며, 그리스도 -4.28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과 그리스의 낮은 탈성별화 정책 수준은 제도 자체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보장 수준이 미미한 데서 기인한다. 또한 이탈리아가 -3.86점, 프랑스가 -2.04점, 벨기에가 -1.98점, 스페인이 -1.97점의 순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보수주의 국가가 전통적 남성생계부양모델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는 기존 논의를 일견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3〉 탈성별화 정책 항목 값과 점수

국가	근로시간 단축이용 가능성 유무	아버지 할당제 유무	젠더평 등 지수	휴직 수준	GDP 대비 총 부모휴 직지출	법정 최 대 노동 시간 (주)	노동시간 선택권 법 제화여부	탈성별화 점수
Belgium	1	0	5	2.62	0.20	38	0	-1.98
Czech Rep.	0	0	4	13.30	1.00	40	1	1.42
Denmark	1	0	6	32.00	0.60	40	0	2.55
France	1	0	3	5.61	0.30	35	1	-2.04
Germany	0	0	2	34.84	0.30	48	0	-1.25
Greece	0	0	4	0.00	0.20	40	0	-4.28
Hungary	0	0	3	16.80	0.80	40	1	0.03
Italy	0	0	4	7.80	0.20	40	0	-3.86
Japan	0	0	5	13.00	0.20	40	1	-0.78
Norway	1	1	6	46.80	0.70	40	1	8.54
Portugal	1	1	4	40.00	0.30	40	1	2.17
Spain	1	0	4	0.00	0.30	40	0	-1.97
Sweden	1	1	6	52.00	0.80	40	0	7.22
UK	0	0	4	0.00	0.40	48	0	-1.1
US	0	0	3	0.00	0.32	40	0	-4.66

V. 분석결과

1. 국가별 일-가족 양립정책 유형화

분석 결과, 탈가족화 정책과 탈성별화 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4가지 차원의 이념형이 구성되었다(〈표 4〉 참조). 우선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은 상대적으로 탈가족화 정책과 탈성별화 정책이 모두 강화되어 있는 유형이다. 보육정책과 아버지 할당제 등을 통하여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돌봄 노동 분배를 추구했던 스웨덴 등의 국가가 이 유형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탈가족화 집중형은 탈가족화 정책의 상대적 수준이 탈성별화 정책의 상대적 수준보다 높은 경우 해당되는 유형이다. 보육제도 등 탈가족화 정책을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탈성별화보다는 탈가족화 수준을 높이는 데에 집중하는 국가들이 이 유형으로 분류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남성 생계부양자 모형이 강하고 보육정책을 위주로 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프랑스, 독일 등이 탈가족화 집중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유형은 탈성별화 집중형으로, 탈성별화 정책의 상대적 수준이 탈가족화 정책의 상대적 수준보다 높은 경우에 해당되는 유형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국가에서 탈가족화 정책이 탈성별화 정책에 비해 우선적으로 발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탈성별화 집중형의 특성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이 유형은 탈성별화 정책의 수준이 절대적으로 높은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OECD 국가 사이에서 탈가족화 정책의 상대적 위치는 낮지만 탈성별화 정책의 상대적 위치는 높은 국가를 의미한다. 탈성별화 집중형에 어떠한 국가가 해당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바, 일-가족 양립정책 유형분류에 있어 새로운 차원의 논의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유형은 미발달형으로, 탈가족화 정책과 탈성별화 정책 모두가 다소 미비한 국가로 해석될 수 있다. 일-가족 양립정책이 전반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국가들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표 4〉 퍼지셋 방식에 따른 일-가족 양립정책의 진리표

변수		속성	이념형
탈가족화(DF)	탈성별화(DG)		
DF(높음)	DG(높음)	DF * DG	탈가족화 · 탈성별화 병행형
DF(높음)	~DG(낮음)	DF * ~DG	탈가족화 집중형
~DF(낮음)	DG(높음)	~DF * DG	탈성별화 집중형
~DF(낮음)	~DG(낮음)	~DF * ~DG	미발달형

Fuzzy 집합 성립을 위해서는 질적 분기점의 설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Ragin(2008)의 제안에 따라 이를 설정하였으며, 도출된 소속 점수, 무소속 점수 및 중간 분기점이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탈가족화 정책의 경우 완전 소속은 4.16점, 완전 무소속은 -6.97점, 중간 분기점은 1.14점으로 나타나며, 탈성별화 정책의 경우 완전 소속은 7.22점, 완전 무소속은 -4.66점, 중간 분기점은 -1.1점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설정한 질적 분기점을 활용, Calibration 기능을 통해 퍼지 점수로 변환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일-가족 양립정책 속성별 소속 점수, 무소속 점수 및 중간 분기점

속성	완전 소속(=1)	중간 분기점(=0.5)	완전 무소속(=0)
	95%	평균	5%
탈가족화	4.16	1.14	-6.97
탈성별화	7.22	-1.1	-4.66

〈표 6〉 일-가족 양립정책 원점수 및 퍼지 소속 점수

국가	탈가족화	탈성별화	탈가족화 퍼지점수	탈성별화 퍼지점수
Belgium	1.44	-1.98	0.57	0.32
Czech Rep.	-5.17	1.42	0.09	0.71
Denmark	4.16	2.55	0.95	0.79
France	2.52	-2.04	0.80	0.31
Germany	2.24	-1.25	0.75	0.47
Greece	-6.97	-4.28	0.05	0.06

국가	탈가족화	탈성별화	탈가족화 퍼지점수	탈성별화 퍼지점수
Hungary	-3.13	0.03	0.17	0.60
Italy	0.78	-3.86	0.47	0.09
Japan	-2.26	-0.78	0.22	0.53
Norway	3.29	8.54	0.89	0.97
Portugal	-1.36	2.17	0.28	0.76
Spain	5.86	-1.97	0.99	0.32
Sweden	1.84	7.22	0.67	0.95
UK	1.14	-1.10	0.50	0.50
US	-4.38	-4.66	0.11	0.05

이후 퍼지 ‘And(퍼지 곱하기, 교집합)’ 기능을 통한 각 유형별 퍼지 소속 점수를 계산하였다. 이는 최소값의 원리에 따른 것으로, 앞서 제시한 4가지 이념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때 최소값을 해당 이념형의 퍼지 점수로 인정하는 방식이다(김교성·김성욱, 2011). 예를 들어 덴마크의 경우 탈가족화 정책 점수는 0.95점, 탈성별화 정책 점수는 0.79점이다. 이 때 탈가족화 정책의 역의 점수는 탈가족화 정책 점수의 여집합($1-0.95$)으로 0.05점이 되며, 탈성별화 정책의 역의 점수는 탈성별화 정책 점수의 여집합($1-0.79$)으로 0.21점이 된다. 이 때 4가지 이념형별 점수 중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의 점수를 계산한다면 탈가족화 정책 점수와 탈성별화 정책 점수를 ‘And’ 하여야 하며, 퍼지 수학에서는 더 적은 값을 택하므로 0.95와 0.79 중 최소값인 0.79점으로 결정된다($=\min(.79, .95)$). 이러한 방식으로 나머지 3가지 이념형별 점수를 도출한 결과 탈가족화 집중형은 0.21점, 탈성별화 집중형은 0.05점, 미발달형은 0.05점으로 나타났다.

최종점수 및 최종유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최대값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는 4가지 이념형 점수 중 가장 큰 점수를 최종유형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덴마크의 예로 돌아가 보면, 4가지 이념형 점수 중 0.79점이 0.21점, 0.05점, 0.05점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덴마크의 최종 유형은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이 되며, 최종 퍼지점수는 0.79점이 된다. 이는 탈가족화 정책과 탈성별화 정책 중 어느 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거나 두 정책 모두 미발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탈가족화 정책과 탈성별화 정책을 동시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

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일-가족 양립정책 속성별 퍼지 점수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국가별 일-가족 양립정책 최종유형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	탈가족화 집중형	탈성별화 집중형	미발달형	최종점수	최종유형
Norway	0.89	0.03	0.11	0.03	0.89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
Denmark	0.79	0.21	0.05	0.05	0.79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
Sweden	0.67	0.05	0.33	0.05	0.67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
France	0.31	0.69	0.20	0.20	0.69	탈가족화 집중형
Spain	0.32	0.68	0.01	0.01	0.68	탈가족화 집중형
Belgium	0.32	0.57	0.32	0.43	0.57	탈가족화 집중형
Germany	0.47	0.53	0.25	0.25	0.53	탈가족화 집중형
Portugal	0.28	0.24	0.72	0.24	0.72	탈성별화 집중형
Czech Rep.	0.09	0.09	0.71	0.29	0.71	탈성별화 집중형
Hungary	0.17	0.17	0.60	0.40	0.60	탈성별화 집중형
Japan	0.22	0.22	0.53	0.47	0.53	탈성별화 집중형
Greece	0.05	0.05	0.06	0.94	0.94	미발달형
US	0.05	0.11	0.05	0.89	0.89	미발달형
Italy	0.09	0.47	0.09	0.53	0.53	미발달형
UK	0.50	0.50	0.50	0.50	0.89	혼합형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은 탈가족화 정책과 탈성별화 정책의 전반적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내에서는 노르웨이가 0.89점으로 가장 강한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성을 띠고, 이어 덴마크는 0.79점, 스웨덴은 0.67점인 것을 알 수 있다.

노르웨이는 사회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1975년에 「Day Care Act」를 통과시키면서 공적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시작한 국가로, 0-2세 아동보육비용이 지난 20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노르웨이의 부모휴직 프로그램은 1990년대를 전후로 상당히 발전하였는데, 이 때 휴직기간을 대폭 늘리고 아버지 할당제를 도입하면서 가족화의 방향을 젠더 평등적으로 재구조화하였다(한경현, 2010).

덴마크는 1990년대를 걸쳐 노르딕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아동 보육비용 수준을 유지하고 아동 돌봄을 공적으로 사회화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더불어 2000년대 초반 이후 부모휴직 기간을 크게 확장하고 임금 100% 보전을 지속하는 등 휴직수준을 상당히 증가시킴으로써 탈성별화를 꾀하였다.

스웨덴의 경우 젠더 평등을 주요 기조로 하여 보육정책과 부모휴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Ellingssoeter, 2000), 특히 1995년 어머니의 돌봄 부담을 덜고 아버지의 돌봄 참여를 강제하는 ‘아버지의 달’ 시행은 탈성별화를 강화하는 획기적인 시도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공공보육 역시 강력하게 추진한 국가이기도 한데, 양육수당을 도입하기보다는 부모휴직 구조를 유연화하고 그 외 돌봄 수요는 공공보육을 통해 해결하면서 탈가족화 정책과 탈성별화 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수정, 2006).

이처럼 노르딕 국가들은 세부적인 정책요소는 다를지라도, 기본적으로 젠더 평등 관점에 근거해 돌봄을 탈가족화가족화 시킴으로써 다른 국가들에 비해 탈가족화 정책은 물론 탈성별화 정책까지 동시에 발달시켰다는 공통적 특성을 가진다(윤홍식, 2007). 이러한 특성은 노르딕 국가들의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 소속 점수가 여타 국가들에 비해 독보적으로 높다는 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두 번째로, 탈가족화 집중형에는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독일이 해당된다. 유형 내에서는 프랑스가 0.69점, 스페인이 0.68점으로 점수가 거의 유사하고, 벨기에가 0.57점, 독일이 0.53점으로 나타난다.

우선 벨기에는 프랑스와 함께 보편적 공공보육을 일정 수준까지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돌봄의 탈가족화 정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이다(서문희·양미선·송신영, 2011; 윤홍식, 2006a). 실제로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가장 확고한 공보육체계를 통해서 돌봄의 탈가족화를 추진하였으며, 벨기에 역시 높은 3-5세 보육등록률과 이에 대한 높은 국가 차원의 재정투입에 기인해 돌봄의 탈가족화 정책을 강화하였다(서문희 외, 2011). 다만 벨기에 고용주 중 38%만이 탄력적 근로시간을 허용하는 등(외교통상부, 2009), 노동시간 조정을 통해 탈성별화를 촉진하려는 요소는 다소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양 국가는 성별적 혹은 성중립적 가족화 요소를 일-

가족 양립정책 내에 포함하면서 보편적인 탈가족화 정책을 높은 수준에서 시행하므로, 탈가족화 집중형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전통적 가족가치와 형태에 대한 강조를 고수해 왔던 스페인 역시 저출산 위기를 인식한 이후, 2003년에 일·가족 양립에 대한 가족정책을 채택하였다(장혜경 외, 2007). 스페인이 탈가족화 집중형으로 분류된 것은 보육권 법제화와 높은 3-5세 아동 보육등록율 등 탈가족화 정책 수준이 최상 위권인 반면, 탈성별화 정책은 고려 대상에서 거의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족정책의 혁명기'라고 불리는 1990년대에 부모휴직과 관련된 급진적 전환이 이루어졌으나 그 요소들은 여전히 전통적 성별분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하였다(Meil, 2006).

또한 독일은 전통적인 성별 분업 논리에 기초한 남성부양자모델의 보수적 가족정책을 유지해 왔지만, 저출산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며 2000년대에 들어 가족정책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한 국가이다(김은영, 2010). 이 때 주력을 기울인 제도는 탈가족화를 위한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구축, 탈성별화를 위한 부모수당제도, 부모휴직제도이다. 독일의 탈가족화 집중형 소속점수(0.53)와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 소속점수(0.47)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일이 탈가족화와 탈성별화 정책 모두를 강화하되 탈가족화에 보다 더 집중한 측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⁷⁾ 이처럼 퍼지셋 분석을 통해 유형 분류를 실시하면, 하나의 유형에 속할 경우 다른 유형에서 아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유형에 어느 정도 속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혼합적 특성까지 파악이 가능하다.

세 번째 유형인 탈성별화 집중형은 상대적으로 탈성별화 정책을 강조하는 경향을 띠는 국가들로, 포르투갈, 체코, 헝가리, 일본이 해당된다. 유형 내에서는 포르투갈이 0.72점, 체코가 0.71점으로 유사한 점수를 가지며, 헝가리가 0.6점, 일본이 0.53점으로 나타난다.

먼저 포르투갈은 부모휴직 단축 이용과 유연한 노동시간 조정이 가능하

17) 실제로 독일의 부모수당제도와 부모휴직제도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남성들의 부모휴직 활용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영, 2010).

며, 유급부성휴가를 시행하고 부모휴직의 소득대체율도 높아 젠더 평등 지수가 높게 나타난다. 또한 보다 많은 남성들이 부모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극하기 위해 2000년에 아버지 할당제를 도입한 결과, 현재 포르투갈의 아버지들은 20일간의 부모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포르투갈의 정책은 젠더 평등을 강조하는 쪽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아버지 할당제를 대상자의 30-40% 가량 이용하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까지도 보이고 있다(OECD, 2007).

체코는 출산율 급감으로 인해 2005년에 「Family Policy Concept」를 수립하고 친가족적 사회 환경을 적극 조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부모휴직 사용시 임금을 보전하고 휴직 사용에 있어 유연성을 부여하였으며, 유자녀 근로자에게 친가족적 환경(근무시간 탄력성 부여, 재택근무 허용 등)을 제공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주로 '탈성별화 정책' 측면을 강화하였다(여성가족부, 2006). 반면 보육 네트워크가 붕괴되면서 2004년을 기준으로 60개 가량의 보육시설만이 남아 있어, 탈가족화 정책 측면은 약화된 측면이 있다(OECD, 2006).

또한 헝가리는 비교적 높은 부모휴직지출, 노동시간 유연성 등의 요소로 인하여 탈성별화 집중형으로 분류되었다. 헝가리는 일반적으로 남성중심적 문화가 강한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일-가족 양립정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탈성별화 정책이 발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부모휴직제도에 비해 보육제도가 미발달하였는데, 2차 세계대전 후 주정부가 보육 서비스를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4년~2003년 사이에 반 이상의 보육시설이 감소한 데서 기인한다(OECD, 2006).

일본은 2000년대 후반부터 여성의 재취업과 저출산 해소를 위해 일-생활균형정책을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위한 노력을 함께 경주하였다. '보육한계설'에 대한 논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종래의 '보육' 중심에서 '워크스타일 변화', '남성의 지원' 등 탈성별화 정책으로 초점이 옮겨간 것이다(홍승아 외, 2008a). 즉, 가부장적인 가족정책을 고수하는 국가로 평가되어 온 일본은, 2008년 이후 탈성별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가족친화적 기업 육성을 위해 육아기의 유연한 근로방식지원, 직장 풍토 개혁, 남성 노동자 육아 참가 등

을 시행한 기업에 대한 양립지원 레벨업 조성금 지급, 남성의 육아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직장 만들기 대책을 실시하는 사업주 지원, 아버지의 육아참여를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부친 씨클, 부친을 위한 육아살롱, 육아아빠 응원사업 등을 들 수 있다(신윤정, 2009). 한편, 일본의 탈성별화 정책 점수(0.53)가 미발달형 점수(0.47)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직까지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일-가족 양립정책 수준이 낮으나 일부 발달된 정책의 경우 탈성별화를 보다 강조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발달형 국가에는 그리스, 미국, 이탈리아가 포함되었는데, 그 중 이탈리아는 미발달형 소속점수인 0.53점이 탈가족화 집중형 소속점수 0.47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그리스(0.94)와 미국(0.89)의 미발달형 소속점수는 1에 가깝게 나타나 다른 유형의 소속점수와는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는데, 이는 일-가족 양립정책의 전반적인 수준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먼저, 그리스는 돌봄의 탈가족화를 위한 충분한 정책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로, 이와 유사하게 윤홍식(2006c)의 연구에서도 그리스에서는 탈가족화 측면의 확대양상이 포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의 일-가족 양립정책은 주로 기업 및 민간 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발전해 왔으며(문은영, 2012), 따라서 탈가족화와 탈성별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탈리아는 스페인과 유사한 돌봄 제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영유아 돌봄은 여전히 가족이 책임지고, 그 외 아동의 돌봄은 보육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이원적인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 다만 이마저도 복지국가 재편 과정을 거치며 선별적 보육정책으로 선회된 결과, 3세 이상의 보육 커버리지는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 3세 미만의 보육 커버리지는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였다(유해미, 2005). 더불어 부모 휴직 유연이용 불가, 아버지 할당제 부재, 노동시간 조정 불가 등 탈성별화 정책은 거의 구축되지 못한 상태이다.

혼합형으로 결론지을 수 있는 국가는 영국으로, 탈가족화 정책과 탈성별화 정책의 수준이 동일하게 0.5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일-가족 양

립정책이 완전히 발달된 것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발달이 약한 것도 아닌 완전한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때 탈가족화 정책이나 탈성별화 정책 어느 한 쪽에 치우치기보다는 두 정책의 속성을 고루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영국은 1998년 「National Childcare Strategy」를 발표하고 아동보육에 대한 투자를 3배 이상 확대했으며, 2004년에 「10-year Strategy for Childcare」, 2006년 「Work and Families Act」를 제정하여 모성휴가와 부성휴가를 동시에 발전시켰다(홍승아 외, 2008a). 결국 영국은 중간 수준의 탈가족화 정책과 탈성별화 정책을 병행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퍼지셋 분석을 활용할 경우 혼합형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와 더불어, 각각의 유형이 가지는 값을 명확히 알 수 있다.

2. 유형별 사회·경제적 성과 비교

이하에서는 일-가족 양립정책 유형별로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아동빈곤율과 같은 사회·경제적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가족 양립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정책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일정한 방향성에 대한 함의를 줄 수 있다. 특히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의 성과와 탈가족화 집중형의 성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탈성별화 정책의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절의 핵심 목적이다.

어느 사회이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자녀 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면, 출산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혹은 이미 일과 가족을 병행하는 유자녀 여성은 이중 부담에 직면하여,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게 되기도 한다(박수미, 2006). 이러한 상황에서 탈성별화 정책을 통해 남성이 가족 내 돌봄 역할을 분담할 경우, 여성이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저출산 완화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모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출산과 여성 고용 문제를 단지 인구정책적 또는 고용정책적 문제가 아닌, 불평등한 성별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았을 때 근본적인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성별 분업 해체를 지원할 수 있는 탈성별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이재경 외, 2005). 이러한 유자녀 여성의 고용

은 가구 소득을 증가시켜 필연적으로 아동 빈곤까지도 완화시킬 수 있다 (Gornick and Meyers, 2003; OECD, 2007).

〈표 8〉은 일-가족 양립정책 유형별로 합계 출산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아동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명)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65세 미만 여성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아동 빈곤율은 아동가구 중 가처분소득이 중위 50% 이하인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사회·경제적 지표를 정책 유형별로 비교하기 위해 집단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출산율의 집단평균 값을 살펴보면,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은 1.94명으로, 탈가족화 집중형은 1.66명으로, 탈성별화 집중형은 1.38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발달형은 1.62명, 혼합형은 1.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이 76.54%이고, 탈가족화 집중형이 67.15%이며, 탈성별화 집중형이 63.83%이다. 미발달형의 경우에는 60.08%, 혼합형의 경우에는 70.98%로 드러났다. 역시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과 탈가족화 집중형을 비교해 보면, 전자가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 빈곤율을 살펴보면,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이 4.62%이고, 탈가족화 집중형은 10.59%, 탈성별화 집중형은 10.52%, 미발달형은 16.01%, 혼합형은 19.48%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집단평균 값에 순위를 부여하면 일-가족 양립정책 유형별로 어느 정도의 사회·경제적 지표를 달성했는지에 관해 개략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첫째, 출산율은 혼합형이 1위이고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영국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높은 출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탈가족화 집중형이 3위, 미발달형이 4위, 탈성별화 집중형이 5위로 나타났다. 즉, 일-가족 양립정책 자체가 미발달 되었거나(미국, 그리스) 탈가족화 정책(독일, 프랑스 등) 또는 탈성별화 정책(포르투갈, 체코 등) 어느 한 부문에 집중하는 국가의 경우 다소 낮은 출산율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이 압도적인 수치로 1위를 기록하였고, 혼합형이 2위로 나타났다. 즉, 일-가족 양립정책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고 상대적으로 균형적인 탈가족화와 탈성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영국의 경우 출산율 지표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지표 두 가지 모두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이는 노르딕 국가들에서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동시에 높게 나타난다는 앞선 실증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Gordo, 2009). 즉, 가족이 직면하게 되는 일과 가정이라는 두 가지 영역이 더 이상 상호대체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어서 탈가족화 집중형이 3위, 탈성별화 집중형이 4위, 미발달형이 5위로 나타났다. 이 세 유형의 경우 출산율에 있어서도 다소 낮은 순위를 기록한 바, 두 성과 지표가 모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동 빈곤율의 경우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이 1위를 차지하였는데, 여타 유형의 아동 빈곤율과 압도적인 차이가 나고 있다. 아동 빈곤율의 경우, 출산율이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가족 양립정책의 성과로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일-가족 양립정책의 수준이 높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아동 빈곤율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하여 월등히 낮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일-가족 양립정책의 효과로서의 아동 빈곤율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2위를 기록한 유형은 탈성별화 집중형이며, 탈가족화 집중형이 아주 근소한 차로 3위에 올랐다. 아동빈곤 감소는 일-가족 양립정책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하여 가구 소득을 높이는 메커니즘을 따르는 만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게 나타난 탈성별화 집중형과 탈가족화 집중형의 아동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4위는 미발달형, 5위는 혼합형이다. 특히 혼합형인 영국의 사례에 주목하여 보면,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한 데 비하여 아동 빈곤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책 내에 탈가족화와 탈성별화 요소가 균형적으로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전반적인 정책 수준이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의 한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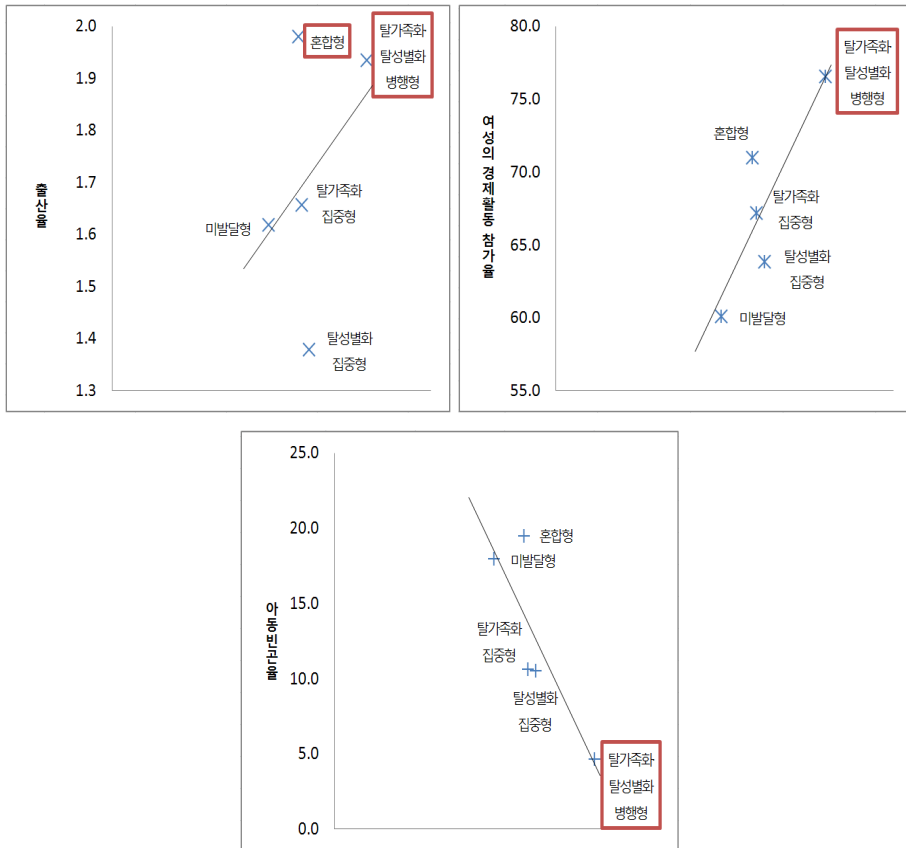
정리하면, 출산율은 혼합형,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 탈가족화 집중형, 미발달형, 탈성별화 집중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 혼합형, 탈가족화 집중형, 탈성별화 집중형,

미발달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 빈곤율은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 탈성별화 집중형, 탈가족화 집중형, 미발달형, 혼합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 일-가족 양립정책 유형별 사회·경제적 지표 비교

군 집	국가	합계 출산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아동 빈곤율㉢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	Denmark	1.88	75.79	3.87
	Norway	1.95	75.91	5.26
	Sweden	1.98	77.92	4.72
	집단평균	(2) 1.94	(1) 76.54	(1) 4.62
탈가족화 집중형	Belgium	1.87	61.34	6.00
	France	1.99	66.69	10.17
	Germany	1.39	71.74	8.92
	Spain	1.38	68.83	17.28
	집단평균	(3) 1.66	(3) 67.15	(3) 10.59
탈성별화 집중형	Czech Rep.	1.49	63.50	10.29
	Hungary	1.26	58.32	9.93
	Portugal	1.37	70.09	-
	Japan	1.39	63.43	11.34
	집단평균	(5) 1.38	(4) 63.83	(2) 10.52
미발달형	Greece	1.51	58.41	14.67
	US	1.93	67.58	22.04
	Italy	1.41	54.24	17.13
	집단평균	(4) 1.62	(5) 60.08	(4) 17.95
혼합형	UK	(1) 1.98	(2) 70.98	(5) 19.48

주 : ㉠ 합계 출산율은 2010년을 기준으로 함(OECD, 2012).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함(OECD, 2013). ㉢ 아동 빈곤율은 2003~2008년을 기준으로 함(LIS,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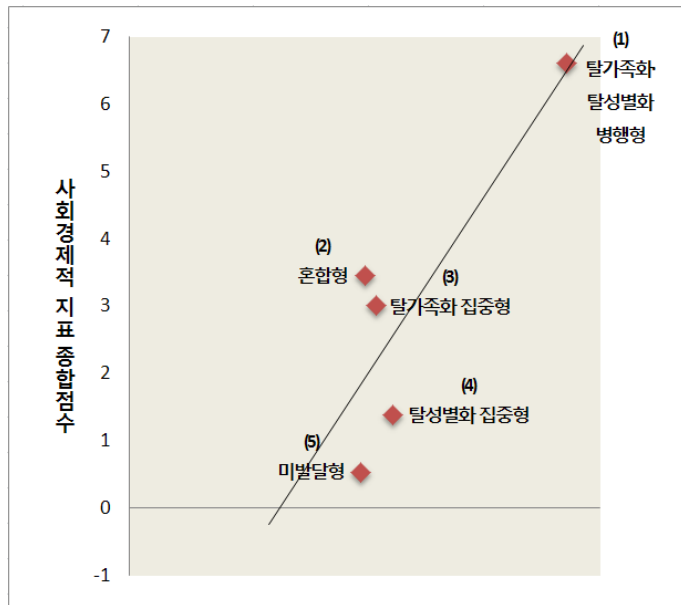
[그림 2] 일-가족 양립정책 유형별 사회·경제적 지표

[그림 2]는 일-가족 양립정책 유형별 사회·경제적 지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첫째, 출산율 그래프를 살펴보면, 혼합형과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이 상위권에, 미발달형이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통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일-가족 양립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일-가족 양립정책의 수준이 가장 높은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이 가장 높고 일-가족 양립정책이 발달 수준이 낮은 미발달이 가장 낮게 나타나, 정(+)의 추세선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빈곤율 그래프를 살펴보면, 이 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지표와 유사하게 일-가족 양립정책과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아동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은 혼합형과 미발달형

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은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경우에는 탈가족화 집중형이 탈성별화 집중형보다 더 높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동 빈곤율에 있어서는 탈성별화 집중형이 탈가족화 집중형에 비해 더 높은 성과를 거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일-가족 양립정책 유형별 사회·경제적 지표 종합점수

[그림 2]에서는 여러 사회·경제적 성과 지표를 각기 별도로 살펴보고 있어, 통합적 성과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출산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아동 빈곤율이라는 세 가지 지표를 하나의 종합점수로 전환하여 보다 간명하게 일-가족 양립정책의 사회·경제적 성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3]에 세 가지 지표를 표준점수로 변환하여 합산한 후 (-) 값은 (+)로 전환하기 위해 상수를 더하여 최종적으로 산출한 ‘사회·경제적 지표 종합점수’가 제시되어 있다. 사회·경제적 지표는 종합점수는 여러 지표를 하나의 값으로 도출한 것이므로, 이 점수가 높을수록 단일 성과를 넘어 사회 전반의 성과지표가 전체적으로 높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유형별 사회·경제적 지표 종합점수를 상세히 살펴보면, 탈가족화·탈성별

화 병행형은 6.61점, 혼합형은 3.45점, 탈가족화 집중형은 3.02점, 탈성별화 집중형은 1.38점, 미발달형은 0.54점으로 나타난다. 유형별 순위가 [그림 3]의 각 유형별 괄호 안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비교해 보면, 1위는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이 차지하였고, 그 뒤를 혼합형이 2위로 따르고 있다. 즉, 일-가족 양립정책 내 탈가족화와 탈성별화 촉진 요소를 균형적으로 내포한 유형일수록 종합적인 성과가 상위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위인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은 2위인 혼합형과 비교했을 때 종합점수가 3.23점 가량 높게 나타나, 두 유형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탈가족화 집중형은 3위, 탈성별화 집중형은 4위, 미발달형은 5위로 나타났다. 탈가족화 집중형이 탈성별화 집중형에 비해 전반적인 성과가 양호한데, 이는 다른 지표들에서도 탈가족화 집중형이 조금씩 높지만 특히 ‘출산율’ 지표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성과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일-가족 양립정책 유형별 수준은 사회·경제적 지표 종합점수와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Ⅵ. 결 론

1. 연구 요약과 함의

본 연구는 탈가족화 정책에 경도되어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기 요인을 타개할 동력을 상실한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일-가족 양립정책의 차후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탈가족화와 탈성별화라는 두 가지 정책 요소를 중심으로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통해 국가별 유형을 도출하고, 출산율,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아동빈곤율 등의 성과를 비교하였다.

먼저 탈가족화와 탈성별화 수준을 기준 변수로 투입하여 일-가족 양립정책을 유형화한 결과, 다섯 가지의 이념형이 도출되었다. 즉, 탈가족화 정책과 탈성별화 정책 수준이 모두 높은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 탈가족화 정책 수준이 탈성별화 정책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탈가족화 집중형’, 탈성별화 정책 수준이 탈가족화 정책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탈성별화

집중형', 탈가족화 정책과 탈성별화 정책 모두 다소 미비한 특성을 지니는 '미발달형', 네 가지 이념형의 특성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혼합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유형별 사회·경제적 성과를 비교한 결과, 먼저 출산율의 경우 혼합형,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 탈가족화 집중형, 미발달형, 탈성별화 집중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의 출산율이 탈가족화 집중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탈성별화 정책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 혼합형, 탈가족화 집중형, 탈성별화 집중형, 미발달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에 속한 국가들은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등의 성과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양 성과가 상호대체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동시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동 빈곤율은 혼합형, 미발달형, 탈가족화 집중형, 탈성별화 집중형,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일-가족 양립정책에 대한 전념수준이 높은 국가들일수록,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세부 정책요소들이 균형 잡힌 국가들일수록 아동빈곤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상의 사회·경제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출산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아동 빈곤율 등의 세 가지 지표를 하나의 종합점수로 전환하여 비교한 결과에서도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형이 월등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그 뒤를 혼합형, 탈가족화 집중형, 탈성별화 집중형, 미발달형이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탈가족화 정책과 탈성별화 정책 수준이 모두 높은 국가일수록 사회·경제적 성과 역시 높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일-가족 양립정책 내에 탈가족화와 탈성별화 요소를 모두 강조하는 정책지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탈가족화 정책과 탈성별화 정책을 동시에 강조할 때 일-가족 양립정책이 내포한 성별 분업 강화 기제를 해소하고 여성의 이중 부담을 예방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은 저출산 해결을 목표로 하여 일-가족 양립정책을 제도적으로 구축한 대표적인 국가로, 돌봄 지원은 양적으로는 증가 추세이지만 전체적인 방향

성과 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윤홍식 외, 2011). 특히 공공보육시설 확대 등 돌봄의 탈가족화 정책은 일정 정도 수준에 올랐으나 탈성별화 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요원한 상황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결과 출산율,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아동빈곤율 등의 성과가 OECD 국가 중 가장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기존의 일-가족 양립 지원체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제도설계 방안은 한국 사회가 무분별한 보육 정책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 탈가족화와 탈성별화 등의 요소를 포괄한 보다 젠더 평등적인 정책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향상됨은 물론,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신사회적 위험요소들을 타개해나가기를 기대해본다.

2. 연구의 한계와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일-가족 양립정책의 탈가족화 성격을 대리하는 지표로 보육정책과 관련된 변수들을, 그리고 탈성별화 성격을 대리하는 지표로 부모 휴가 및 노동시간 정책과 관련된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일-가족 양립정책 계량화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들을 본 연구에서도 활용함으로써, 자료의 제약 상황에서 해당 개념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최선의 근사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탈성별화 지표의 경우 현실을 완벽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최대한의 근사치를 통한 조작화 과정을 통해 이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외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에 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독일, 스페인, 일본, 포르투갈 등 비교적 최근에 일-가족 양립정책이 확대된 국가들에 대한 질적 분석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가족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들에서 일-가족 양립정책이 어떠한 정치·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확대되었는지, 실제 제도 이용자와 고용주의 인식이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해당 국가의 일-가족 양립정책 유형이 실제로 해당 국가의 복지(젠더) 레짐 차원으로까지 발전될 것인지

를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가족 양립정책의 구체적 조응양태에 따라 국가별 사회·경제적 성과를 살펴보는 데에서 나아가, 이러한 정책 요소들이 각각 어떠한 역동을 통해 성과를 발생시키는지 보다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거시적 정책 지표로써는 포착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일-가족 양립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족 내 돌봄노동 분담을 나타내는 시간자료 등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업 부모까지 아동양육수당과 조세감면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보육서비스 이용을 통한 탈가족화를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보육정책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에서 아동양육수당과 조세감면제도가 가족 내 돌봄에 대한 보상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의 보육정책 범주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아동양육수당과 조세감면제도까지 정책 범주로 포함하여 그 직간접적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14).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김교성·김성옥 (2011). “복지국가의 변화과정과 전략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정책. 제18권 제3호. 129-164.
- 김민희·김경희 (2010). “입법과정에 나타난 일-가족 양립 문제의 프레임에 관한 연구: 2000~2006년 국회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담론 201. 제13권 제4호. 71-101.
- 김수정 (2006). “스웨덴 가족정책의 삼중동학: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가족과 문화. 제18권 제4호. 1-33.
- 김영옥·김태홍·홍승아·배호중 (2012). 2012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김은영 (2010). “가족정책과 출산율: 독일 인구는 증가할 것인가?” FES-Information-Series. 1-12.
- 김진옥 (2005). “근로기혼여성의 이중노동부담에 관한 실증연구: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협조적 적응, 이중노동부담, 적응지체 가설의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3호. 51-72.
- 류연규 (2007). “복지국가의 탈가족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탈가족화 수준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제12권 제2호. 259-232.
- 류연규 (2011). “젠더관점에서 본 가족정책 유형”. 윤홍식 외(공저), 국내외 가족정책의 쟁점과 가족환경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1-70.
- 문은영 (2012). 서울시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설립타당성 검토. 서울여성가족재단.
- 박수미 (2006). “한국가족의 양성평등과 저출산”. 정책&지식. 281권. 2-27.
- 서문희·양미선·송신영 (2011). 우리나라의 보육실태와 외국사례. 육아정책연구소.
- 손승영 (2005). “한국사회 저출산 원인과 가족친화적 정책대안”. 가족과 문화. 제17권 제2호. 285-316.

- 손승영 (2011). 한국 가족과 젠더 : 페미니즘의 정치학과 젠더 질서의 재편성. 파주: 집문당.
- 송다영 (2011). “복지국가 체제로 본 가족정책: 돌봄정책의 전개와 한국적 함의”. 윤홍식 외(공저), 국내외 가족정책의 쟁점과 가족환경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03-146.
- 송다영·장수정·김은지 (2008). 일가족양립지수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신경아 (2009). “일-가족 양립논의의 현황과 쟁점”. 강이수(편). 일, 가족, 젠더 : 한국의 산업화와 일-가족 딜레마. 한울아카데미.
- 신윤정(2009). “일본의 ‘새로운 저출산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제149권. 104-115.
- 여성가족부 (2006). “세계 동향보고 - 체코 저출산 대책”.
<http://www.mogef.go.kr>에서 2013.8.20. 인출.
- 외교통상부 (2009). “벨기에 저출산 및 인구정책 현황”.
<http://www.mofa.go.kr>에서 2013.8.20. 인출.
- 유해미 (2005). “보육정책의 패러독스: 이탈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1권 제1호. 233-264.
- 윤홍식 (2005).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 : 노동 주체의 관점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469-492.
- 윤홍식 (2006a). “일-가족양립 정책을 통해본 경제협력개발기구 22개국들의 가족정책 :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 윤홍식 (2006b). “부모·부성휴가를 통해본 남성 돌봄 노동참여 지원정책 비교: 경제개발기구 15개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2호. 223-249.
- 윤홍식 (2006c). “OECD 21개국의 부모권과 노동권 보장수준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비교연구: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시설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3호. 341-370.

- 윤홍식 (2007). “노르딕 4개국 가족정책의 보편성과 상이성 : 아동보육과 돌봄 관련 휴가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제2호. 327-354.
- 윤홍식(2011). “가족책임주의와 복지국가의 가족정책비교: 돌봄의 사회적 제공방식의 유형화”. 윤홍식 외(공저). 국내외 가족정책의 쟁점과 가족환경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1-102.
- 윤홍식·김인숙·최은영 (2007). 일과 가족생활 양립을 넘어서: 쟁점, 사례, 원칙과 방향.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용역 보고서.
- 윤홍식·송다영·김인숙 (2011). 가족정책 -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 공동체.
- 윤홍식·류연규·송다영·신경아·윤성호·이숙진·안세아 (2011). 국내외 가족정책의 쟁점과 가족환경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삼식·유계숙·윤홍식·최효진 (2008).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경·조영미·이은아·유정미 (2005). “유럽의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한국여성학. 제21권 제3호. 133-166.
- 장지연 (2005). “여성의 경제활동과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제102권. 45-56.
- 장지연·이정우·최은영·김지경 (2005). 일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장혜경 외(2007).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일, 가족 양립 정책의 활성화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의룡·양재진 (2011). “복지국가의 유형화 분석 : 지속성과 변화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행정학회 2011년도 춘계국제학술대회자료집.
- 조영미 (2012). “유럽의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저출산·고령화 대응 학술심포지엄. 377-39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 영 (2007). “사회투자전략으로서의 아동정책의 변화 양상”. 김연명 외 (편). 우리나라에서의 사회투자정책 적용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최영준 (2009). “사회과학에서 퍼지셋 활용의 모색: 퍼지 이상형 분석과 결합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15권 제3호. 1-30.

- 최은영 (2008).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동향과 한국에의 함의”. 생활과학연구논총. 제12권 제2호. 15-34.
- 한경현 (2010). “노르웨이 가족정책의 변화 과정 분석 : 정당의 정치적 행위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84-104.
- 홍승아 (2010). “저출산시대, 왜 일가정양립정책인가?” 젠더리뷰. 제19권. 4-10.
- 홍승아·류연규·김수정·정희정·이진숙 (2008a). 일가족양립정책의 국가별 심층사례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홍승아·류연규·김영미·최숙희·김현숙·송다영 (2008b).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및 한국의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황은정 (2013). 일-가족 양립정책의 젠더평등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jornberg, U. (2002). Ideology and choice between work and care: Swedish family policy for working parents. *Critical Social Policy*, 22(1), 33-52.
- Chesnais, J. C. (1996). Fertility, family and social policy in contemporary Western Europ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4), 729-739.
- Coltrane, S. (2009). Fatherhood, gender and work-family policies. In J. C. Gornick and M. K. Meyers(Eds.), *Gender equality. Transforming family divisions of labor*. New York: Verso.
- Eichhorst, W. and Thode, E. (2002). Vereinbarkeit von familie und beruf - Benchmarking deutschland aktuell. Bertelsmann Stiftung, Gütersloh.
- Ellingsoeter, A. (2000). Welfare states, labour markets and gender relations in trasion. pp. 89-110. In T. Boje and A. Leria(Eds.), *Gender, welfare state and the market: Towards a new division of labour*. London: Routledge.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London : Polity press.
-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 (2002). A new gender contract. In G. Esping-Andersen, G. Duncan, A. Hemerijck and J. Myles(Eds.),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Eurostate Statistical Books (2009). Reconciliation between work, private and family life in the European Union. Eurostate European commission.
- Gershuny, J., Godwin, M., and Jones, S. (1994). The domestic labour revolution: a process of lagged adaptation. In M. Anderson, F. Bechhofer and J. Gershuny(Eds.), The social and political economy of the househol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61-197.
- Gerson, K. and Jacobs, J. A. (2004). The time divide : Work, family and gender inequality. Havard University Press.
- Giullari, S. and Lewis, J. (2005). The adult worker model family, gender equality and care: The search for new policy principles and the possibilities and problems of a capabilities approach. Economy and Society, 34(1), 76-104.
- Gordo, L. R. (2009). Why are women delaying motherhood in Germany? Feminist Economics, 15(4), 57-75.
- Gornick, J. and Meyers, M. (2003). Families that work: Policies for reconciling parenthood and employment. NY: Russell Sage Foundation.
- Hochschild, A. R. (1989). The second shift. New York: Viking.
- Hook, J (2006). Care in context - Men's unpaid work in 20 countries, 1965-2003.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 639-660.
- ILO Working Time Database (2013).
- Kvist, J. (1999). Welfare reform in the Nordic countries in the 1990s: using fuzzy set theory assess conformity to ideal typ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9(3), 231-252.
- Kvist, J. (2007). Exploring diversity: measuring welfare state change with fuzzy-set methodology. In C. Jochen and A. S. Nico(Eds.), Investigating welfare state change: The 'dependent variable problem' in comparative analysis. Edward Elgar.

- Leitner, S. (2003). The caring function of the family: Belgium in comparative perspective. ESPAnet conference, Changing European Societies - the Role of Social Policy, 11.13~15.
- Lister, R. (1994). She has other duties': Women, citizenship and social security. In S. Baldwin and J. Falkingham(Eds.), Social security and social change: New challenges. Hemel Hempstead: Harvester Wheatsheaf.
- Luxemburg Income Study (2013). <http://www.lisproject.org>에서 2014.9.30. 인출.
- Meil, G. (2006). The evolution of family policy in Spain. Marriage & Family Review, 39, 359-380.
- Orloff, A. S. (1993). Gender and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 303-28.
- OECD (2006). Starting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OECD.
- OECD (2007). Babies and bosses -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 synthesis of findings for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 OECD (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www.oecd.org/social/family/doingbetter에서 2014.11.24. 인출.
- OECD (2013). <http://stats.oecd.org>에서 2014.9.30. 인출.
- OECD (2012). OECD Factbook.
- OECD Family Database (2013).
- Ragin, C. C. (2000). Fuzzy-set social sci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agin, C. C. (2008). Redesigning social inquiry fuzzy sets and beyo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bstract

A Study on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Ideal Types and its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s

Eun-Jeong Hwang , Hee-Won Yoo

This research has its objects on finding the future direction of what the Korean society must pursue, which has lost the power to resolve the causes of a variety of economic and social crisis, due to its heavy focus on defamilialization policy. For this, through the Fuzzy-set ideological analysis, we drew trends per nation, and compared total fertility rate, female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 and child poverty rate in our focus on two policies: defamilialization and degenderization.

As the analysis result,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of the OECD nations was categorized into five ideal types: parallel defamilialization and degenderization, focused defamilialization, focused degenderization, undeveloped, and combination. As a comparison result of these categories of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s, the nations with developed policies for defamilialization and degenderization had better performances in the aspect of total fertility rate, female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 and child poverty rate.

The above result suggests the need for the pursuit of a policy that emphasizes both defamilialization and degenderization in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This is because when both defamilialization and degenderization are focused simultaneously,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resolves the reinforcement mechanism of gendered division of labour contained in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as well as improves the possibility of prevention of doubled burden on female. This implies the need for Korea, who emphasized its focus on defamilialization, to seek a new policy focusing on degenderization. Through this, we expect the female rights to be improved, as well as resolve the risks of alternative society threatening the Korean society.

Keywords :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Defamilization, Degenderization,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